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착수

##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전기료와 결합된 징수방식 개선 김현 "유보" 요청 불구 표결 처리...野 의원 반대 성명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KBS 수신료는 29년 동안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됐는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따로 분리한다.

방통위는 14일 제19차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TV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한국 전역에 위탁해 온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수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거쳐 이달 5일 국민제안심사위가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KBS 수신료 징수 업무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분리징수를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방송법 제67조 2항에서는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면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현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법안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입법·개정할 수 있어 추진이 가능하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방통위는 이 시행령을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바꿀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 데다, 5기 방통위에서도 징수 방식과 관해서 논의가 없었던 점, 또 방통위 업무보고에도 없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근거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용 관련", "현행 유지 필

요" 등으로 국회에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던 만큼 방통위가 입장을 뒤집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추천 인사인 이상인 상임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방통위 구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의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 정책 또한 국민 여론을 수용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해 국정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르면 수신료 금액과 납부 의무자 범위, 징수 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돼야 하고 방송법에서는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 승인을 얻어 징수한다고 돼 있다"며 "다만 징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 위탁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 박수기 의원 "징계 전력 교원 교장 승진" 시교육청 비판

광주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고 시험지 유출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교장으로 승진시킨 것에 대해 시의회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14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징계 대신 승진, 교육청의 인사파행'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시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 열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했다"며 "이 중 1명은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사건으로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 받았으며 또 다른 1명은 지난 2019년 수학 시험문제를 기존의 유인물에서 그대로 베껴 출제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무차별 열렸던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됐다"며 "그러나 불과 1년 뒤 열린 교원양성위에서 이들에 대한 교장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 '깜깜이·밀실' 광주 도시계획위 혁신, 또 다시 도마 위

'깜깜이·밀실 운영' 논란을 낳아온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시민 알권리와 행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강도높게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운(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은 14일 제317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계위는 전문가들이 모여 시장(市長)의 도시계획이 적정한지 살펴, 유일무이한 도시계획의 견제 기구이자 시민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이제 밀실 밖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정책토론회에 이어 또 다시 도계위 혁신이 도마에 오른 셈이다.

도계위 혁신론이 잇따라 공개 거론된다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의혹이 깔려 있다.

정 의원은 "시장의 손과 발인 고위 공무원과 개발 이익의 수혜자인 건축사, 엔지니어링 업체 종사자로 구성된 도계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위원회 운영 세칙,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회의 내용, 기술 일반도인 심의 쟁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결론, 2년 간 부결된 심의 안건 0건, 그리고 끝 없는 특혜와 유착 의혹"을 비판했다.



본회의장 앞 피켓팅하는 옹헤인 의원  
옹헤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방출' 관련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 권익위 "선관위 조사 비협조 감사이유...조직 부패 숨겨"

### "선관위, 갑자기 돌변해 권익위 조사 거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 조사 거부를 이유로 권익위의 현장 조사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어떠한 방향으로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훈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는 6월2일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선관위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급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선관위는 권익위의 현장 조사를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의 조사단장을 맡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앞서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알뜰한 품수였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감사를 거부하면서 권한쟁의를 준비하고 있다. 권익위도 감사원의 감사 시작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9월 전·현직 고위 간부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투표' 논란, 북한 해킹 유예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선관위 고위 직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 광주시의회 '임금 성차별' 개선 조례안 발의

### 남성의원 전원 동참...채은지 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녀 성별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나는 뿌리깊은 관행을 해소하자는 젊은 여성 의원들의 의결이 20~60대 남성의원들이 너나없이 동참했다.

"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다지는데 의미있는 동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1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발판 삼아 민간부문의 임금 성차별도 개선해 공평임금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등 필

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개인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30대 여성의원인 제안한 이번 조례에는 정무청 의장을 비롯해 심철의 제1부위원장, 강수훈 운영위원장,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 박희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시의회 소속 남성의원 13명이 전원 공동발의로 뜻을 같이해 의미를 더했다.

의회 일파에선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에 의미를 더한 뜻깊은 입법 동행"이라는 반응이다.

채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가 공공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공평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동참해준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행정과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에 다짐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 윤리특위 '코인 논란' 김남국 소명 듣는다

### 오늘 오후 7시 국회서...김남국 출석할 걸로 보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오는 15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의혹 논란의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김 의원이 자문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자문위 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자문위는 내일 오후 7시 국회에서 두번째 회의를 연다. 자문위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고 2차 회의를 통해 김 의원의 소명을 듣기로 결정했다.

당시 유재홍 자문위원장은 "양당의 징계 의뢰를 받아서 사유로 적어진 것에 대해 (김 의원의) 소명을 들겠다"며 "29일로 정해진 시간까지

저희의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문위는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윤리특위 자문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자문위원들은 7명으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가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 이후에 필요하면 가상자산 관련 외부 전문가를 모셔 관련 내용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 자문위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자문위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尹 "태양광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 조사"

### '文정부 태양광비리' 적발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이도훈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인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 공무원과 민간 업체가 유착해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허위 유권해석을 해주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는가 하면, 시장 교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특정기업에 특

혜를 줬다.

또 에너지정책 공무원이 민간업체 청탁을 주선한 후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거나, 허위기술평가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인 정부의 사결정 라인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가'는 질문에 "태양광 비리와 관련한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거지 전인 정부의 그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미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뉴시스

## 野 뭉 6개 상임위원장 선출...예결 서삼석·산자 이재정

### "전문성·지역 등 종합적으로 고려"

국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뭉 6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보건복지·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행정안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보임 안건을 처리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교홍 행정안전위원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김철민 위원장은 이날 재석 242표 중 216표, 신 위원장은 202표, 박 위

장은 211표, 이 위원장은 184표, 김교홍 위원장은 216표, 서 위원장은 209표로 당선됐다.

김철민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과 정책을 잘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놓여 있다.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개혁과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문제와 환경문

**호 매 민 평**

이태헌

## 국민우통

안주삼으셔서  
후쿠시마세출수력한점요

국민들이불안해하니  
총리가먼저저러수마시겠수

태헌